

##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다국적군 파병의 국제정치: ‘동맹 관계성’과 ‘안보 정향’ 요인의 적용\*

김영인 ■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승인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감행된 전쟁으로, 당시 미국으로부터 다국적군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들의 파병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다국적군 파병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국적군 파병정책의 결정요인으로 ‘동맹 관계성’과 ‘안보 정향’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두 변수의 적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에서 네 국가의 다국적군 파병 동기와 양상을 비교·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 국가들은 동맹 관계성을 기준으로 파병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후 국가 고유의 안보 정향에 따라 다국적군 파병의 네 가지 유형을 산출하였다. 요컨대, 본 논문이 제시한 두 변수는 국가들의 파병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다국적군 파병의 규칙적인 패턴과 유형을 도출하는데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이라크 전쟁, 다국적군 파병, 파병정책 결정요인, 동맹 관계성, 안보 정향

## I. 서론

국제정치에서 다국적군(multinational forces)<sup>1)</sup>이 참전하는 파병 문제는 주권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정치학회 RESEARCH GRANT’ 지원을 받아 완성된 연구임.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E-mail: younginkim@yonsei.ac.kr)

1) 다국적군은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기구가 주체가 되어 평화의 파괴 또는 위협을 가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평화강제 활동을 수행하는 군대를 일컫는다. 다국적군은 침략격퇴 및 무력 진압 목적의 적극적 무력사용이 가능하며, 참여국가 또는 지역기구가 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지휘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sovereignty)과 개입(intervention)의 논리가 상충하는 쟁점 현안이다. 그리고 파병 개념은 개별 국가의 안보행동을 규명하는 데 기초적 단서를 제공하는 유용한 분석적 도구가 된다. 하지만 기존의 다국적군 파병 연구들은 특정 이론의 설명 변수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개별적 사례분석에 집중해 온 경향이 컸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국가들의 파병 동기와 양상에 있어 규칙적인 패턴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화 작업에도 아쉬움을 보여왔다. 이에 본 연구는 다국적군 파병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 구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03년 발발한 이라크 전쟁에서 전개된 국가들의 파병사례를 경험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국제정치에서 다국적군의 파병 현상은 1990년대 이후 국제분쟁 해결방식이 점차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sup>2)</sup>' 개념을 포괄하게 되면서 증가하였다. 즉, 다국적군 파병은 1990년대 초반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이 연이어 실패하자, 1995년 1월 유엔이 지역기구나 특정 국가가 다국적군을 결성하여 평화강제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면서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Boutros-Ghali 1995). 다국적군 파병은 기본적으로 침략행위의 발생지역이나 평화가 교란된 지역에서 평화강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개된다. 따라서 다국적군이 주도하는 전쟁에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들은 파병의 선택과 행위에 있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다국적군 파병은 여타 파병 유형들<sup>3)</sup>에 비해 국제정치의 작동원리와 개별 국가의 안보행동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유엔 미승인의 다국적군 파병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sup>4)</sup>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획득하지 못한 다국적군 파병은 국제적 정당성이 부족하나, 파병요청 주체의 힘의 논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병의 정치적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성을 갖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9년 NATO가 주도한 코소보 전쟁과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2) 평화강제는 분쟁 관리에 있어 평화조성(peace making)이나 평화유지(peace keeping) 활동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강제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평화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오늘날 파병은 대체로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다국적군 파병, 국방협력 활동 등 세 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901040000](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901040000). 2022/5/23 검색).

4) 다국적군 파병의 유형은 유엔 승인(UN authorized)의 파병과 유엔 미승인(UN non-authorized)의 파병으로 구분된다(한국국방연구원 2004, 20). 전자는 국제분쟁 관리의 합법적 권한을 보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정당성을 가진다. 이와 달리, 후자는 유엔과 별개로 독자적 판단하에 군사적 개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전쟁 수행의 명분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향이 크다.

전쟁의 다국적군 파병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유엔의 분쟁 해결 절차와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감행한 전쟁으로, 당시 미국으로부터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들의 파병정책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점에서 이라크 전쟁은 전쟁 수행의 정당성이 부족한 다국적군 파병이 갖는 국제정치적 속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전쟁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국적군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전쟁을 개시하거나 군사작전을 주도한 국가들은 자신이 직접 군사적 행동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파병을 자연스러운 절차 또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이와 달리,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들은 파병 과정에서 동맹 강대국의 힘과 국제규범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군 파병의 동기와 양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데 이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파병사례의 국가군(群)으로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을 선정하였다. 이 네 국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으로 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들이다. 그리고 전쟁에 투사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면서도 동맹관계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국(middle power) 범주에 포함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군 파병의 개념을 고찰한 후,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기존 접근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다국적군 파병정책의 결정요인으로 '동맹 관계성'과 '안보 정향'을 새롭게 제시한 후, 두 변수의 조합에 의해 도출되는 다국적군 파병의 유형을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가 구축한 분석의 틀이 적실성을 갖는지 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다국적군 파병을 요청받은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 사례를 들어 검증한다.

## II. 다국적군 파병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1. 다국적군 파병 개념

파병은 군사 영역의 일상적인 용어로 국방정책 또는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익숙한 개념이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파병은 전쟁의 수행이나 분쟁 해결의 수단 차원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학술적 용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병은 유엔을 비롯해 특정 국가나 지역기구 등의 요청에 따

라 군대 또는 군사 요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와 같은 파병은 주권 원칙과 개입의 논리가 부딪히는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개별 국가의 안보 행동 속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탈냉전 이후부터 그 성격과 전개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파병은 주권국가의 안보정책 과정에서 힘과 규범 요소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높은 분석 개념이 된다.

파병의 개념적 속성은 기본적으로 주권과 대비되는 개입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다. 국가 간의 비개입 원칙을 보장한 주권과 달리, 개입은 보통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 문제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행위를 말한다(Nye 2007, 162). 그중에서 특히 무력을 동원하는 군사적 개입(military intervention)은 국가의 내부 관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sup>5)</sup> 구체적으로 군사적 개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타 국가의 영토나 속령(屬領)에 군사적으로 관여하는 행동으로 이해된다(Connaughton 1992, 3). 따라서 군사적 개입은 대상 국가의 정치적 권위구조를 결정 또는 변화시킬 목적으로 영토선을 가로질러 군사 조직을 배치하는 국가의 대외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국적군 파병 개념을 “특정 국가나 지역 기구의 요청으로 자국 군대를 다국적군 군사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타국의 영토 내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접근은 국가 간의 전쟁이나 국내 분쟁에 대한 외부 세력의 무력 개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군사적 임무를 띤 병력이나 민간 요원을 포함하는 광의의 파병 개념 대신, 전쟁이나 분쟁지역에 전투 임무를 수행 및 지원하기 위해 군대나 이에 준하는 군사조직이 참여하는 협의의 파병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요컨대, 다국적군 파병은 한 국가가 타 국가 및 지역기구의 요청에 따라 전투부대를 비롯한 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를 해외에 파견하여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안보 행동으로 정리된다.

## 2. 선행연구의 분석 경향

국제정치학에서 다국적군 파병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의 분석 경향을 보인다. 첫째, ‘동맹 딜레마(alliance dilemma)’<sup>6)</sup> 차원에서 국가들의 다국적

5) 군사적 개입에 대해 한편에서는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가의 자주적 독립성 차원에서 개입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질서 유지와 정의(justice) 차원에서 개입을 허용하는 입장을 보인다(Nye 2007, 164-165).

6) 약소국과 강대국 간에 맺어진 동맹은 상대적 힘과 역할의 차이로 비대칭성의 관계를

군 파병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비대칭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약소국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은 약소국이 갖는 안보 취약성으로 인해 동맹 강대국이 파병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대안적 선택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체적으로 군사력이 충족되지 않는 약소국은 안보를 제공해 주는 강대국이 이끄는 해외 군사작전에 병력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군사적 지원과 동맹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군 파병에 참여하기도 한다. 즉, 여러 가지 국가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동맹 강대국이 약소국의 안보 문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약소국은 강대국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파병을 결정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리먼(Princeton Lyman)과 한승주(Han Sung-Joo)는 미국과의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비롯된 방기의 두려움이 한국의 베트남 전쟁 파병을 이끌었다고 주장하였다(1970; 1978). 즉, 이들은 당시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차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한 한국이 미국의 참전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한나(2007)는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파병 요인을 한미동맹의 비대칭성과 연계시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맹의 약화 및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동맹국의 외부위협이 높아질 경우에 약소국은 동맹 강대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시즈카(Katsumi Ishizuka)는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표방한 신보수주의 방침에 주목하여, 일본이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을 동맹국 미국이 요구한 국제안보 영역에서의 책임분담 요인을 제시하였다(2005, 80).

둘째, 경제적 이익(economic interest)을 얻기 위해 국가들이 다국적군 파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국적군 파병은 군사·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창출한다. 즉, 파병 국가들은 분쟁지역의 질서 확립 및 안정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원유수송로 확보 및 에너지자원 수급 등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박동순·구형희 2019, 277). 또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병력 파견국으로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되면, 전후 재건사업에 자국의 기업을 진출시킬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제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

---

형성하여, 다양한 갈등 상황을 양산한다. 이러한 가운데, 상대적 약소국은 몇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감수해야 하는 불만족한 상황 즉, 동맹 딜레마 상황이 놓이게 된다(Handel 1995, 138).

우에는 글로벌 평화활동에의 참여가 병력보전비용 획득을 통한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전제국 2011, 62-64).

대표적으로, 최동주(1996)는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요인으로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였다. 그는 1960년대 ‘개발 지향적 국가(development state)’를 추구하였던 박정희 정부가 신중상주의적(neo-mercantilistic)인 대내외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미국 측에 끈질기게 전투 병력 파병을 요청한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였다. 김일영 역시 한국의 베트남 파병이 수출시장 확보, 실업률 해소, 공공차관 도입 등 경제적 혜택의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었음을 강조하였다(2000, 130-131). 이 밖에도, 에스쿠데(Carlos Escudé)는 비동맹 국가였던 아르헨티나가 탈냉전 직후 미국이 주도한 걸프전에 참전한 이유에 대해 경제난 해소를 위한 경제적 동기를 언급하였으며(1997, 97, 134), 타르노프(Curt Tarnoff)는 9·11 테러 사건 이후 진행된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요르단의 참여는 미국으로부터 공격 원조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하였다(2005, 14).

셋째, 규범이나 정체성과 같은 관념(idea) 요소가 다국적군 파병을 이끈다는 입장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내부 갈등이나 폭력행위로부터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패 국가(failed states)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래 분쟁지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을 허용하는 국제적 규범에 기인한 것이다(Finnemore 2003, 6). 한편, 국가 내부에서 형성된 안보 정체성(security identity) 역시 해당 국가의 해외 군사활동 선호와 실전 여부를 결정하는 동인(動因)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안보 정체성이 안보 분야에서 국가의 대외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규범 요소와 관련하여, 베링거(Ronald M. Behringer)는 2000년 5월 재개된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전쟁에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중견국들이 참전하게 된 요인으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규범에 주목하였다(2005, 315-317). 정체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김관옥(2014)은 한국의 1, 2차 베트남 전쟁 파병에 대해 당시 ‘안보 취약국’의 정체성을 가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물리적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추동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한국군의 역할 정체성이 보호대상국에서 지원국으로 변화됨에 따라 3, 4차 파병이 조건부 파병으로 선회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훅(Glenn D. Hook)과 손계영(Son Key-Young)은 과거 일본의 평화 지향적 정체성이 탈냉전과 9·11 테러를 경험하며 변화를 맞이하였고, 이와 같은 변화된 정체성이 일본 자위대의 역외 다국적군 파병을 이끄는 요인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2013).

### 3. 선행연구의 한계

이처럼 국내외 학계에서 국가들의 다국적군 파병을 다룬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곧 폭력행위를 수반한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왔고, 국제정치학 역시 평화연구보다는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한 전쟁 연구에 적극성을 보여왔기 때문이다(하영선·남궁곤 편 2012, 237). 따라서 국제정치학에서 다국적군 파병 문제는 무수한 동맹이론을 비롯하여 세력균형론, 집단안보, 국제평화활동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뤄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경향에 따라 다국적군 파병정책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연구들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우선, 다국적군 파병 요인을 동맹 딜레마 차원에서 이해한 연구들은 국제체제를 강대국의 힘이 반영된 불평등의 위계적 사회로 규정함으로써, 비강대국의 파병 결정과정의 역동성이나 안보정책 메커니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분석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다국적군 파병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물질적 요소에 치중함에 따라 안보행동을 근본적으로 추동하는 국가 내부의 안보 태도나 방향성을 간과해 온 측면이 있다. 또한, 관념적 차원에서 다국적군 파병의 참가동인을 밝힌 연구들은 국가의 대외적 행위가 일정 부분 안보 효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들의 해외파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병요청 주체와의 관계에 기인한 권력질서나 상호 간 안보협력의 교환 정도를 간과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정치에서 다국적군 파병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접근법과는 다소 차별적인 분석적 시각을 채택하고자 한다. 우선, 다국적군 파병의 결정 여부는 국가 간의 관계적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상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동맹 강대국으로부터 파병을 요청받은 하위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상위 동맹국에 대한 '동맹 관계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따라 파병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다음으로, 다국적군 파병의 실제 양상은 국가 내부의 '안보 정향' 즉, 자국 안보에 대한 일정한 태도나 방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것은 국가들의 파병 행위가 해당 국가 고유의 안보 정향에 따라 파병의 활동성과 행동반경을 확장하려는 형태와 스스로 제한하여 응집하려는 형태로 나뉘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 Ⅲ. 다국적군 파병에 관한 이론적 틀

#### 1. 다국적군 파병정책의 결정요인

##### 1) 동맹 관계성(alliance relationship)

동맹 관계성은 동맹국 간 또는 동맹체 집단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상호관계의 속성으로, 유사시 군사적 공동행동을 약속한 동맹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변수이다. 즉, 동맹 관계성은 둘 이상의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물질적, 심리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정도로 이해된다. 이처럼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의 안보 네트워크(network)에서 배태된 동맹 관계성은 국가들의 해외파병 결정에 있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때 같은 국가라 할지라도 상대 동맹국이나 소속 동맹체와의 관계를 얼마만큼 중시하고, 경시하느냐에 따라 안보행동의 실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동맹 관계성은 기본적으로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 사이에 축적되어 온 역사적 경험과 안보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상대 동맹국이나 동맹체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동맹구조의 위계질서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동맹관계에서 안보 자율성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할 경향이 크고, 동맹 강대국이나 소속 동맹체가 주도하는 전쟁이나 군사작전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동맹구조에서 위계적 지위가 높은 국가들은 국력의 우위성에 기초해 동맹 내 안보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도권을 보장받는다(황진환 외 2014, 91-92).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맹구조의 위계성(hierarchy)은 대외적 안보 상황이나 동맹 참여국의 대내적 여건이 전환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맹 내 권력구조의 변화는 국가들의 안보행동 선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동맹 관계성은 동맹을 맺은 상대 국가 혹은 동맹집단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안보협력의 호혜성(reciprocity)에 따라 차별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국가 간의 안보협력을 전제로 하며,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타 국가 또는 동맹체 내에서 상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안보 혜택을 교환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가들이 국제정치에서 국가이익을 계산하여 행동하는 합리적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들은 동맹을 자국의 안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기제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동맹 상대국이나 동맹체 전체가 주는



안보이익을 고려하는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에 따라 동맹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해 나간다. 이러한 점에서 동맹관계에서 발생하는 안보협력의 호혜성은 국가들이 동맹과 관련된 대외적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 2) 안보 정향(security orientation)

안보 정향은 한 국가가 내재하고 있는 자국 안보에 대한 일정한 태도나 방향성을 일컫는다.<sup>7)</sup> 이것은 국가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안보 가치가 정책 참여자에 의해 수용되어 안보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관념 변수라 할 수 있다. 안보 정향은 대내외적 여건이나 집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생산되거나 변화하는 유동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안보 정향은 안보 가치를 토대로 국가마다 안보행동의 양상을 차별화시키는 동인이자, 정책결정자에게 안보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침로(針路)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안보 정향은 전쟁과 같은 특정 안보 현안에서 국가의 대외적 행위에 대한 방향과 범위를 조율하는 자주적 가치판단의 척도가 된다.

안보 정향은 해당 국가가 우선시하는 안보 가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안보 개념의 핵심이 국가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value)'의 보존에 있다고는 하나, 실제 안보 가치는 국가마다 처한 환경이나 역사적 전통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 안보 가치의 우선순위(priority)는 해당 국가의 안보 정향을 특징 짓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국가들은 안보의 대상을 국가 수준으로 한정하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계속성과 영토를 보존하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고수하는가 하면, 또 어떤 국가들은 국가 중심의 안보에서 벗어나 인간 개인을 안보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추구하기도 한다. 즉, 국가안보에 주력하는 국가는 안보행동의 반경과 활동성을 자국의 영토 내부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높고, 인간안보를 보다 추구하는 국가는 분쟁지역에서 국제안보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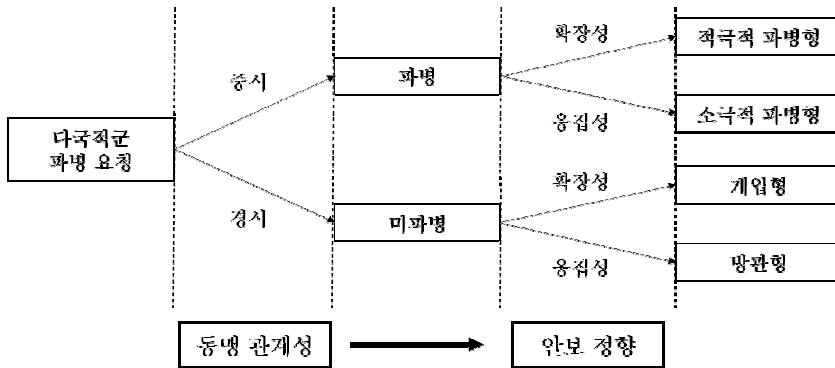
또한, 안보 정향은 안보정책을 구현하는 정책결정자 집단의 국가 역할구상

7) 홀스티(Kalevi J. Holsti)는 국가가 국제정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정향(orientation) 요소가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정향은 외부환경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인 태도나 언질(commitment)로 국가의 대내외적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 전략(fundamental strategy)'으로 이해된다(1977, 109).

(role conception)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sup>8)</sup> 이것은 안보 가치를 실제 안보행동으로 연결해주는 정책 참여자의 정책선호나 전략 방침에 따라 안보 정향이 미묘하게 수정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특히 최고정책결정자는 국가의 대외적 행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안보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정책결정자가 국제안보 영역에서 설정한 국가 역할구상은 자국의 안보행동 양상을 차별화시키는 데 있어 유의미성을 가진다.

## 2. 분석의 틀: 다국적군 파병의 유형과 결정요인의 상관관계

〈그림 1〉 다국적군 파병의 결정요인과 유형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는 다국적군 파병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동맹 관계성과 안보 정향을 제시하였다. 두 변수는 다국적군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의 파병 결정과 집행과정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면, 유엔 미승인의 다국적군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들은 일차적으로 동맹 관계성을 기준으로 파병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국가들이 파병요청 주체와의 동맹 관계성을 중시(重視)하면 파병 결정이 내려지고, 경시(輕視)하면 미파병이 결정된다. 이차적으로는 선택된 파병과 미파병이 국가 내부의 안보 정

8) 홀스티는 국가의 역할구상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역할을 스스로 인식하는 신념체계로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행동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1970, 236-247).

향을 기준으로 각각 두 갈래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안보 정향이 확장성 또는 응집성이나에 따라<sup>9)</sup> 파병은 적극적 파병형과 소극적 파병형으로, 미파병은 개입형과 방관형으로 분류된다.

〈표 1〉 다국적군 파병의 네 가지 유형

		동맹 관계성	
		중시	경시
안보 정향	확장성	(A) 적극적 파병형	(C) 개입형
	응집성	(B) 소극적 파병형	(D) 방관형

정리하면, 다국적군 파병의 유형은 '동맹 관계성'과 '안보 정향'을 두 축으로 하여 조합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도출된다.

#### IV. 사례분석: 이라크 전쟁 시 국가별 파병유형

##### 1. 일본의 파병유형: 적극적 파병

###### 1) 미일동맹의 역사적 변천과 동맹 관계성

오늘날까지 일본방위의 주축이 된 미일안보조약은 1951년 9월 체결되어 양자 동맹 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냉전 시기 일본이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두 국가의 동맹관계는 바퀴의 '축과 살(hub and spoke)'과 같은 중심부-주변부 관계로 고착화되었다(김상준 2013, 78). 탈냉전기 들어 미일동맹은 국제정세와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불확실성 도래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일동맹의 공고화는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일본은 21세기 국제 테러리즘에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1년 10월

9) 안보 정향의 확장성(expandability)은 대외적 안보 이슈에 대한 국가의 안보 태도가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안보행동의 참여 범위와 관여 정도를 넓히고자 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안보 정향의 응집성(condensability)은 해당 안보 현안에 대한 국가의 안보 태도가 소극적 또는 수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스스로 안보행동의 반경과 활동성을 축소하려는 성질을 일컫는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5월에는 주일미군 재편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하여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작전 운용에 관한 상호연계성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일본과 미국의 안보 호혜성은 높았다고 평가된다. 미국은 대(對)중국 견제와 국제분쟁 해결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본의 안보역할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 역시 역내 안정적 질서 구축과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 기회 창출 차원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였다. 한편, 미일동맹은 역사적 경로 의존성과 제도적 불평등으로 인해 동맹구조의 권력질서가 위계적 양상을 띤다. 현재 미일안보조약은 일본 전역에 미군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일행정협정에 따라 미군 병사의 치외법권과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미군 지휘체계 예속 등 동맹 차원의 제도적 위계성이 이어지고 있다(마고사키 우케루 2013, 92-95).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이라크 전쟁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성을 상당히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 2) 일본의 안보 정향: 인간안보 추구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외교정책의 주요 노선으로 인간안보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인간안보가 헌법적 제약과 반군사주의 규범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대외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Soeya 2005, 104-109). 특히나 탈냉전 이후 안보 대상의 초점이 국가에서 인간으로 전환되고, 인간안보가 유엔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일본은 인간안보를 국가의 대외적 목표 달성의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인간안보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캐나다, 호주 등의 중견국들과 함께 인간안보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 위상을 확립시켜 나갔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일본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를 인간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개발과 평화를 연계시킨 인간안보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다. 일본은 2001년 1월 인간안보 위원회를 설립한 후 약 2년간의 논의를 거쳐 인간안보 정책의 방향과 행동방침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후 유엔이 ‘인간안보 자문위원회(ABHS)’를 창설하는 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0년 만에 개정한 2003년도 「ODA 현장」에 인간안보 개념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인간안보 정책의 법적, 재정적 근

거를 확립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4, 184-16).

### 3) 미국의 파병 요청과 일본의 적극적 파병

미국은 이라크 전쟁 개시 4일 만인 2003년 3월 24일 베이커(Howard Baker) 주일(駐日) 미국대사를 통해 이라크전 이후 치안유지 활동에 공헌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정식 요청하였다. 이후 베이커 대사는 3월 2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進次郎) 일본 총리와와의 면담에서 이라크 전후 재건을 위한 일본의 협력을 재차 요청하였다(김용수 2003). 일본 정부는 이보다 앞선 이라크 개전 당일인 3월 20일 각료 안보회의를 개최하여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입각한 이라크전 지원을 강화하기로 신속히 결정하였다. 이후 고이즈미(小泉 進次郎) 총리는 5월 23일 미국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부흥지원과 미국과 영국 등 동맹국 병력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해 자위대 파병<sup>10)</sup>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6월 13일 「이라크 인도적 복구지원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 법안을 7월 4일 중의원과 26일 참의원에서 가결했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일본 정부는 2003년 12월 9일 임시 각료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이라크 파병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날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결정 요소로 미일동맹 관계를 강조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3). 이라크 파병 기본계획을 토대로, 일본 정부는 2003년 12월 이래로 자위대를 이라크 남부 사마와 지역에 순차적으로 파견하였다. 이중 육상자위대는 2004년 1월 16일 제1차 파병을 실시한 이래 2006년 6월 20일 철수 시점까지 약 5,500명의 대원이 이라크 현지에서 인도적 지원과 다국적군에 대한 안전확보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Ministry of Defense 2006, 282).

일본의 인간안보 정책은 이라크 전쟁 파병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우선,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선포한 2003년 3월 18일 담화 발표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및 생화학무기가 독재자와 테러집단에 넘어가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이라크 내 인간안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개전 일에는 전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와 NGO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위대에 의한 긴급 인도주의적

10) 본 연구는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전쟁 참여를 파병 행위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일본은 이라크 전쟁에 중무장한 육상자위대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전투지역에 배치하여 미국 등 다국적군의 전투를 지원하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지원이 제공될 것을 천명하였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 이라크전 개입을 추구한 사실은 「2003년 외교청서」에서 인종, 종교, 민족 분쟁에서 발생한 인권(human rights) 침해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4, 198). 결과적으로 일본이 2003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실시했던 이라크에서의 인도주의 활동은 이라크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sup>11)</sup>

## 2. 한국의 파병유형: 소극적 파병

### 1) 한미동맹의 역사적 변천과 동맹 관계성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체결 직후인 1953년 10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핵심으로 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신생 대한민국은 안보 차원에서 국가생존을 보장받는 대신, 미국과의 비대칭 동맹관계를 수용하였다. 냉전 시기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한미동맹은 탈냉전기 들어 보다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국방부 2021, 162-164). 요컨대, 탈냉전 시대 양국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한미동맹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테러리즘, 평화유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3년을 전후한 한미간 안보협력 호혜성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대테러 국제연대에서 동맹국 한국의 외교·안보적 도움이 절실하였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한국의 확고한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국 역시 남북한 대립 구도라는 한반도 냉전 질서가 잔존(殘存)하는 가운데, 북핵 해결과 대북 억지력 확보 그리고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 있어 미국의 안보력이 긴요하였다. 한편, 2000년대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는 상호간의 국력과 정보 능력의 차이로 동맹구조의 위계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한미행정협정(SOFA)의 사법권 침해 문제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11) 이라크 정부는 일본이 자위대를 파병하여 지역 밀착형 인도복지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대이라크 ODA 지원 및 약 60억 달러의 채무삭감 등 다양한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Ministry of Defense 2006, 288).

보유 및 지휘구조 문제에서 비대칭성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당시 한국의 대미동맹 관계성은 상당히 중요시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한국의 안보 정향: 국가안보 고수

냉전 종식 이후 전개된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정과 심각한 경제난은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정권 유지와 생존전략 차원에서 선군정치(先軍政治)를 강화한 북한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게 된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촉발된 제1차 북핵 위기 이래 북한 핵무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인식되었다.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2년 10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였고, 이로써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2002년 12월 '핵동결 해제'를 발표한 데 이어 2003년 1월에는 NPT 탈퇴를 선언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북한의 전통적 군사적 위협과 북핵 문제의 재발이라는 국가안보 위기의 이중고 속에 출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북핵 해결의 3대 원칙으로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천명하였다(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32-34).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는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대남 전투준비 태세와 심리적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특히 2003년 3월부터 북한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 준비 및 한국의 파병 조치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고조된 안보 긴장 상태를 경감시켜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 3) 미국의 파병 요청과 한국의 소극적 파병

미국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13일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이라크 군사작전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3월 20일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비전투병력의 파병방침을 발표하였다(국정홍보처 2008, 270-271). 한국의 1차 이라크 전쟁 파병은 국내외 반전 및 파병반대 여론

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 만에 신속히 진행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파병 요청에 한국 정부가 빠르게 대응한 배경에는 한미동맹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3년 7월 11일 발간된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에서 파병결정의 첫 번째 이유로 ‘한·미 동맹관계 강화’를 명시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한편, 이라크 전쟁의 전후 복구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 미국은 2003년 9월 4일 롤리스(Richard Lawless) 국방부 부차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투병 파병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은 한국의 안보정책에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그 이유는 1차 파병 결정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무엇보다 이라크 파병이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 1511’호와 현지 조사단의 결과 내용을 근거로 들어 2003년 12월 17일 2차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후 정부는 2004년 7월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 아르빌(Arbil)에 파병한 이래 4년 동안 연인원 18,700여 명이 파병임무를 완수한 후 2008년 12월 철군하였다. 한국의 두 차례에 걸친 이라크 파병 결정은 한미동맹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확인 및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외교통상부 2005, 91).

하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이라크 파병 문제는 심각한 딜레마 상황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당시 한국은 제2차 북핵 위기를 둘러싸고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과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당위성이 맞물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이유로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면서도,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를 신중히 고려한 소극적인 파병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실제 파병부대의 임무를 살펴보면 2차 파병의 경우 명목상 전투 병력을 파병하였으나, 평화 및 재건지원을 파병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군의 전투행위를 최대한 배제하는 듯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자이툰 부대의 전투병력 규모 역시, 네 차례의 파병 연장동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국방부 2009,

12)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에는 “한국 방위의 공동운명체인 미국이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동맹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한·미간의 굳건한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있다. 이런 면에서 이라크전 파병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국방부 2003, 83).



111).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 상황과 한반도 안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이라크 전쟁에서의 전투행위를 회피하려고 한 한국 정부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3. 캐나다의 파병유형: 개입

#### 1) 캐나다와 미국의 안보관계 변화와 동맹 관계성

캐나다와 미국은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공동으로 창설하였고, 1958년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협정을 맺으며 군사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냉전 시기 캐나다는 미국의 방위력에 의존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추구하였다. 특히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과 같은 중대한 안보 쟁점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탈냉전 이후 두 국가는 국제사회의 혼란과 갈등 방지에 공동의 관심을 보였지만, 안보정책의 우선순위와 접근방식을 차이로 첨예한 외교적 갈등을 겪었다. 일례로 대인지뢰금지협약 체결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신설에 있어 캐나다와 미국은 상반된 입장으로 대치하였다. 그리고 캐나다는 9·11 테러 이후 전개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대테러 방침을 지지했음에도, 자국 군대의 파병 여부와 미군 보호를 위한 군사적 임무를 둘러싸고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Ross & Hira 2006, 7-8).

2000년대 초반 캐나다의 대미동맹 관계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두 국가가 양자 및 다자동맹을 통해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안보 목표와 그 달성방식을 둘러싸고 양국의 정책선호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라크 전쟁 개전 당시 캐나다의 집권 정당인 자유당의 대외정책 기조가 대미 추종(追從)외교의 탈피에 있었다는 점에서(외교통상부 2008, 72), 자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미국의 안보정책에 대해 캐나다는 상당한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다자주의(multilateralism)적 해결원칙에 배치되는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캐나다의 대미동맹 관계성은 경시될 수밖에 없었다.

#### 2) 캐나다의 안보 정향: 인간안보 추구

캐나다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인권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으며, 분

쟁지역에 대한 인도적 개입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인도적 위기 상황이 급증하자, 캐나다는 국제사회에서 인간안보를 공식적인 외교정책 기조로 채택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MacLean 2000, 269-276). 캐나다는 인간안보의 핵심을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of Fear)’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안보전략 차원에서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캐나다는 1990년대 후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하며 국제사회에서 인간안보를 선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캐나다의 인간안보 정책은 실패 국가(failed states)의 재건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1990년대 긴축재정 체제하에서 국제규범과 연성권력(soft power)을 내세워 인간안보 담론 형성에 집중했던 캐나다는 2000년대 들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경성권력(hard power)을 활용한 적극적인 인간안보 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은 캐나다로 하여금 취약하고 비민주적 국가의 존재가 테러의 촉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내 인간안보의 위기를 높일 수 있음을 각인시켜 주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선거감시단 파견, 치안유지 및 난민 귀환 등 실패 국가의 재건과 안정화 작업을 인간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Bernard 2006, 249-252).

### 3) 미국의 파병 요청과 캐나다의 이라크 재건과정 개입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이 임박한 2003년 3월 14일 유엔의 승인이 부재하더라도 캐나다가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Brown 2003). 이후 3월 17일에는 영국 정부가 캐나다 정부에 이라크 전쟁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 여부에 대해 다시 문의하였다(Sayle 2010, 15). 여기에 대해 캐나다의 크레티앵(Jean Chrétien) 총리는 3월 16일 내각 회의를 주재하여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 미참여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17일 크레티앵 총리는 하원 연설에서 이라크 전쟁 불참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2007, 314-315).

캐나다의 전쟁 불참 선언은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다자주의 정책 기조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내면적으로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캐나다의 반감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오랜 기간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가치를 추구해 온 캐나다의 입장에서 볼 때, 유엔 미승인의 이라크 전쟁은 국제 사회의 안정과 캐나다의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잘못된 전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캐나다는 미국이 탈냉전기 유일한 초강대국이자 자국 안보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라크 전쟁 미파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국가재건 과정에는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내비쳤다. 크레티앵 총리는 2003년 4월 8일 정부의 이라크 계획을 밝힌 의회 연설에서 전쟁의 미참전과 별개로 이라크 국가 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입한다는 정부 방침을 역설하였다 (McCarthy 2003/4/10). 그리고 4월 중순에는 캐나다의 그레이엄(Bill Graham)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파월(Colin Luther Powell)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 이후 이라크 복구과정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Barry 2005, 228-232).

캐나다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자 인간안보 차원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료진, 안전요원 등 재난지원팀 150명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3억 규모의 캐나다 달러를 지원하고, 2004년 1월에는 이라크에 5억 6,400만 달러의 채무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Ek & Fergusson 2010, 10). 같은 해 12월 부시 대통령이 마틴(Paul Martin) 캐나다 총리에게 이라크 선거감시단 훈련을 위한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자, 캐나다 정부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이와 함께, 캐나다는 2004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라크 국제선거 감시포럼'을 자국 오타와(Ottawa)에 개최함으로써 이라크 선거를 후원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 4. 독일의 파병유형: 방관

##### 1) 독일과 미국의 안보관계 변화와 동맹 관계성

1, 2차 세계대전 당시 상대 교전국으로 참전했던 독일과 미국의 관계는 전후 소련의 군사적 팽창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안보협력 관계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서독(West Germany)이 1955년 10월 NATO에 편입된 이래, 서독과 미국은 냉전기 동안 대서양 횡단의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하지만 냉전 시기 두 국가는 1970년대 미국이 추진한 '퍼싱-II 미사일'의 독일 배치 문제와 같은 일부 안보 사안에서 참여한 대립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Szabo

2005, 7). 탈냉전 시대 통일된 독일은 대미 군사적 협력체제를 지향하면서도, NATO 내 핵정책 검토과정에서는 미국과 뚜렷한 이견을 표출하였다. 특히 독일은 1993년 3월 발발한 코소보 전쟁을 계기로 유럽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유럽 자체의 방위력 구축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미국과의 위계적 동맹 질서를 약화시키는 차원에서 자국의 독자적인 외교안보정책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독일의 대미동맹 관계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탈냉전기 독일의 군사적 역량과 위상이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이전처럼 미국의 군사력이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안보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0년 10월 통일 이후 독일은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 영토, 경제력 분야 등에서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부터 독일은 자율적 판단하에 안보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고, 유럽 방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보 기여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미국의 독선적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이라크 전쟁에서 독일은 자주적으로 반(反)이라크 전쟁 입장을 피력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 2) 독일의 안보 정향: 국가안보 고수

20세기 양차 대전의 주범국 독일은 전쟁기간 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범하여 전쟁 참상(慘狀)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타 국가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 때문에 패전 이후 독일은 과거 나치 정권이 저지른 군국주의 유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외교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억제문화(culture of restraint)'를 수용하게 되었다(Dettke 2018, 164). 또한 독일은 1954년 채택한 '독일조약 2조'에 따라 자국의 안보행동 반경을 제한하는 기본노선을 정립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전후 독일은 무력 사용에 민감한 국가로 탈바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토 밖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안보 태도를 고수하게 된 것이다(Federal Ministry of Defence 1994).

한편, 냉전 시기 독일은 동서 대결구도의 최전선에 위치하여 항시적으로 안보 위협에 노출된 국가로 존속하였다.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전쟁은 서독으로 하여금 재무장과 NATO 가입을 통해 범대서양 군사동맹체의 일원이 될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안보 측면에서는 오히려 동독에 위치한 약 30만 명의 소련군

과 직접적으로 대치해야 하는 안보 불안정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냉전 시기 독일은 진영 간 갈등 양상에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국가의 생존과 영토의 계속성에 주력해야 했다. 탈냉전 시대에 진입하여 통일된 독일은 점차 국제안보적 역할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냉전 시기 적대국으로 대치했던 오랜 분단국의 경험과 국가 안보행동의 억제문화가 독일 내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 3) 미국의 파병 요청과 독일의 이라크 전쟁 방관

독일 정부는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 공격 가능성이 제기된 2002년 중순부터 이라크 전쟁 참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슈뢰더(Gerhard Schroder) 총리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라크 전쟁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고, 집권 연립정당인 '적록연정(Red-Green coalition)' 역시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저항적 반대를 계속 이어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울포위츠(Paul D. Wolfowitz) 국방부 차관은 12월 NATO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이라크 전쟁 지원을 요청하였고, 독일 정부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라크 점령을 위한 병력 파병을 요청하였다(Eberle 2019, 63-64). 하지만 독일은 미국과의 협력 대신 프랑스, 러시아와 삼각 연대를 형성하여 이라크 전쟁 개시를 무산시키는 데 주력하게 된다. 당시 독일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 지위를 이용해 프랑스, 러시아와 공조하면 충분히 국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라크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이라크 전쟁이 임박하자 미국의 이라크 문제 접근방식을 강력히 비판하였다.<sup>13)</sup> 그리고 2003년 3월 20일 전쟁이 개시되자, 군대 미파병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독일 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미참전 이유로 이라크와 테러의 직접적 연계성 부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동맹국 미국의 안보정책과 해결방식에 대한 독일의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9·11 테러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였고, 국제분쟁 해결 과정에서 미국

13) 슈뢰더 총리는 당시 연설을 통해 “독일은 전쟁을 막으려고 했다. 최후의 순간까지 노력하였다. 이라크 정권의 무장을 해제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바로 유엔이다...미국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전쟁의 논리가 평화적 기회를 이겼다.”라고 발언하였다(슈뢰더 2017, 216).

의 강제적 방식보다는 외교를 통한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외교적 자율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독일의 길(deutscher Weg)'을 분명히 추구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독일이 전통적으로 고수해 온 국가안보 가치는 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독일 정부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반서방 정서가 만연해 있는 중동지역에서의 전쟁 발발은 유럽의 안보 긴장을 유발하여 결국 독일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유엔 미승인 상태에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감행한 이라크 전쟁은 독일 내에 뿌리 깊게 형성된 역외 군사적 개입에 대한 반대 정서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파병 요청에 저항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실제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입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V. 결 론

국제정치에서 다국적군 파병사례는 분쟁지역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기구 주도의 평화강제 임무가 추진되었던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다자간 안보 협력 방식이 통용되는 최근에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다국적군 파병 개념은 국제정치의 작동원리와 국가 안보행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기초적 단서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 현실에서의 양적 증가와 분석작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학계 차원의 연구는 분명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국적군 파병을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라크 전쟁 시 나타난 다국적군 파병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한 후, 이를 토대로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의 파병사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다국적군 파병의 결정요인으로 '동맹 관계성'과 '안보 정향'에 주목하였다. 동맹 관계성은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동맹국 간 또는 동맹체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계 기반의 변수이다. 그리고 안보 정향은 국가 내부적으로 형성된 자국 안보에 대한 일정한 태도로 실제 국가행동의 방향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정향 기반의 변수이다. 분석 결과, 두 변수는 유엔 미승인의 다국적군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들의 파병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순차적으

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파병의 규칙적인 패턴과 유형을 도출하는데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다국적군 파병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해외파병에 대한 국제정치적 이해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다국적군 파병정책의 결정요인으로 동맹 관계성과 안보 정향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적용함으로써 국가들의 파병사례를 동시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셋째, 오늘날 국제적 정당성이 부족한 다국적군 군사활동에 파병을 요청받는 국가들이 대외적 '관계'와 대내적 '정향'이라는 다국적군 파병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게르하르트 슈뢰더. 김소연, 엄현아, 박성원 역. 김택환 해제. 2017. 『게르하르트 슈뢰더 자서전: 문명국가로의 귀환』. 서울: 메디치.
-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 국방부. 2003.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 서울: 국방부.
- \_\_\_\_\_. 2009. 『국방백서. 2008』. 서울: 국방부.
- \_\_\_\_\_. 2021. 『국방백서. 2020』. 서울: 국방부.
- \_\_\_\_\_. 2022.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901040000](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901040000) (2022/5/23 검색).
- 국정홍보처. 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5: 통일·외교·안보』. 서울: 국정홍보처.
- 김관옥. 2014. “베트남 파병정책 결정요인의 재논의: 구성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37, 9-38.
- 김상준. 2013. “일본의 안전보장과 군사 활동성.” 『21세기정치학회보』 23(1), 71-92.
- 김열수. 2000.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PKO)』. 서울: 오름.
- 김용수. 2003. “<이라크戰> 주일 美대사, 日에 전후 재건 협력 요청.” 『연합뉴스』 (3월 27일).
- 김일영. 2000. “196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정: 수출지향형 지배연합과 발전국가의 물질 기초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4), 121-143.
- 마고사키 우케루. 양기호 역. 문정인 해제. 2013.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서울: 메디치.
- 박동순, 구형희. 2019. 『국제분쟁과 평화활동』. 서울: 선인.
- 외교통상부. 2005. 『외교백서. 2004』. 서울: 외교통상부.
- \_\_\_\_\_. 2008. 『캐나다 개황. 2008』. 서울: 외교통상부.
- 이석우. 2015. “한미동맹의 동맹 안보딜레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전제국. 2011. 『소프트 파워 강국을 지향한 글로벌 평화활동』. 서울: 한국국



방연구원.

- 최동주. 1996. "한국의 베트남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0(2), 267-287.
- 하영선, 남궁곤 편저. 2012. 『변환의 세계정치. 제2판』. 서울: 을유문화사.
- 한국국방연구원 편저. 2004. 『이라크주둔 다국적군의 유엔평화유지군 전환가능성과 대비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황진환, 서춘식, 윤정원, 김순수, 김인수, 정성임. 2014. 『(新) 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 Handel, Michael 저. 김진호 역. 1995. 『약소국 생존론』. 서울: 대왕사.

#### 영문 자료

- Barry, Donald. 2005. "Chrétien, Bush, and the War in Iraq." *American Review of Canadian Studies* 35(2), 215-245.
- Behringer, Ronald M. 2005. "Middle Power Leadership on the Human Security Agenda." *Cooperation and Conflict* 40(3), 305-342.
- Bernard, Prosper, Jr. 2006. "Canada and Human Security: From the Axworthy Doctrine to Middle Power Internationalism." *American Review of Canadian Studies* 36(2), 233-261.
- Brown, DeNeen. 2003. "Canada's Leader Rejects Sending Troops to War." *Washington Post*, March 18.
- Boutros-Ghali, Boutros. 1995. *Supplement to an Agenda for Peace*. New York: United Nations.
- Chrétien, Jean, 2007. *My Years as Prime Minister*. Toronto: Alfred A. Knopf Ltd.
- Connaughton, Richard. 1992.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1990s: A New Logic of War*. New York: Routledge.
- Cooper, Andrew F., Richard A. Higgott & Kim Richard Nossal. 1993.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 Dettke, Dieter. 2009. *Germany Says "No": The Iraq War and the Future of Germa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Eberle, Jakob. 2019. *Discourse and Affect in Foreign Policy: Germany and the*

- Iraq War*. New York: Routledge.
- Ek, Carl & Ian F. Fergusson. 2010. *Canada-US Relations*.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Escudé, Carlos. 1997. *Foreign Policy Theory in Menem's Argentina*.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 Federal Ministry of Defence. 1994. *White Paper on German Security Policy*. Berlin: Federal Ministry of Defence.
- Finnemore, Martha. 2003. *The Purpose of Intervention: Changing Beliefs about the Use of For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George, Alexander L. 1993. *Bridging the Gap: Theory and Practice in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Han, Sungjoo. 1978.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Conflict: An Analysis of the US-Korean Alliance." *Orbis* 21(4), 893-912.
- Holsti, Kalevi J. 1970.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4(3), 233-309.
- Hook, Glenn D. and Key-Young Son. "Transposition in Japanese State Identities: Overseas Troop Dispatches and the Emergence of a Humanitarian Power?"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7(1), 35-54.
- Holsti, Kalevi J. 1977.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Ishizuka, Katsumi. 2005. "Japan's Policy towards UN Peacekeeping Operations." *International Peacekeeping* 12(1), 67-86.
- Lyman, Princeton. 1970. "Korea's Involvement in Vietnam and Its Impact." *Asian Survey* 6(10), 28-35.
- MacLean, George. 2000. "Instituting and Projecting Human Security: A Canadian Perspectiv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4(3), 269-276.
- McCarthy, Shawn. 2003. "Canada will Help Rebuild Iraq." *Globe and Mail*, April 10.
- Ministry of Defense. 2006. *Defense of Japan 2006*. Tokyo: Ministry of Defens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3. "Statement by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https://www.mofa.go.jp/region/middle\\_e/iraq/issue2003/pmstate0312.html](https://www.mofa.go.jp/region/middle_e/iraq/issue2003/pmstate0312.html) (2022/4/5 검색).
- \_\_\_\_\_. 2004. *Diplomatic Bluebook 2004*. Toky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Nye, Joseph S. 2007.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New York: Pearson/Longman.
- Ross, Douglas & Anil Hira. 2006. "Canada, a Land of Deep Ambivalence: Understanding the Divergent Response to US Primacy after 9/11." *Canadian-American Public Policy* 68, 1-51.
- Sayle, Timothy. 2010. "But He Has Nothing on at All!" Canada and the Iraq War, 2003." *Canadian Military History* 19(4), 5-19.
- Soeya, Yoshihide. 2005. "Japanese Security Policy in Transition: The Rise of International and Human Security." *Asia-Pacific Review* 12(1), 103-116.
- Szabo, Stephen F. 2004. *Parting Ways: The Crisis in German-American Rel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Tarnoff, Curt. 2005. "Foreign Aid: An Introductory Overview of U.S. Programs and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January.

Abstract

**International Politics of  
Multinational Forces Dispatch in Iraq War:  
Focusing on ‘Alliance Relationship’  
and ‘Security Orientation’**

Youngin Kim ■ Yonsei University

The Iraq war led by the United States in 2003 was a war that failed to secure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s a result, countries that were asked to send multinational forces from the United States had difficulty in dispatch policy processes.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alliance relationship’ and ‘security orientation’ as determinants of multinational forces dispatch policy. In addition, empirical case analysis was conducted on Japan, Korea, Canada, and Germany, which were requested to dispatch multinational forces during the Iraq Wa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lliance relationship factor determined whether countries would participate in multinational forces dispatch, and the security orientation factor determined the actual aspect of multinational forces dispatch.

Key Words: Iraq War, Multinational Forces Dispatch, Determinants of Dispatch Policy, Alliance Relationship, Security Orientation